
한국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정책방향¹⁾

- 외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여유진* · 김태완**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양극화 및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외환위기 전후(1996년, 2000년, 2003년) 불평등 실태를 소득원천별, 학력별, 연령별로 분석하고 이를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먼저 모든 불평등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효과도 개선되었지만, 전체 불평등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별로 볼 때 최근의 불평등 증가에서는 학력간 소득격차의 효과가 커진 것으로 밝혀져 교육프리미엄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불평등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집단 내 불평등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좀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공적이전소득 즉 사회복지제도를 체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특히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이 임금소득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금지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소득불평등, 지니분해, 엔트로피분해

1) 본 연구의 내용은 여유진 · 김미곤 · 김태완 · 양시현 · 최현수(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보완한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I. 서론

최근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가 정책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불평등 현황 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두 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첫 번째, 외환위기 전후로 한국의 불평등도는 악화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도는 외국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인가? 둘째, 한국의 불평등도는 소득원천별, 학력별, 연령별로 어떠한 부문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불평등의 구조는 외국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 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김재호·김승택(2001), 박찬용 외(2002), 정진호 외(2002), 유경준 외(2003), 성명재·김종면(2004), 김용성(2005)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최근의 경향을 보는데 있어서의 '시의성'이나 전체 국민의 실태 파악이라는 측면에서의 '대표성'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는 통계청의 1996년과 2000년 가구소비실태 조사와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근까지의 불평등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자료의 '대표성'과 '시의성' 문제를 다소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LIS 원자료를 이용한 불평등지수분해를 시도함으로써 국가간 비교를 통해 좀 더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시도하였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절에서는 분석에 앞서 분석에 사용되는 개념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지니분해와 엔트로피분해 등의 분석기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제3절에서는 다양한 불평등 지표들을 사용하여 1990년 전후부터

2000년 전후까지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의 불평등 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지니분해와 엔트로피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소득원천별·학력별·연령별 불평등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해 요약하고, 향후 분배와 관련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론

1. 조작적 정의와 분석단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경제적 측정단위로서 소득, 지출, 부 중 소득을 사용하여 불평등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는 첫째,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원에 대한 통제권(command) 그 자체가 욕구충족의 정도를 결정하며, 둘째, 불평등의 정도는 기본적 욕구충족이라는 제한된 영역보다는 자원의 편재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대한 접근가능성 측면에서도 소득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중에서도 어떠한 범주의 소득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과 LIS의 소득의 정의와 범주에 따라 가처분소득(DPI)을 중심으로 소득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모두 활용하고, 국제비교 시에는 가처분소득 개념을 중심으로 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을 제한 금액으로 조작화된다²⁾.

2) 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중 우리나라의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는 소득세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직접세로 통합되어 있어 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한계로 밝혀둔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인구학적 분석단위는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의 인구학적 분석단위는 '1인 균등화된 소득' (single-adult equivalent income)을 가진 개인이다. 이는 기본적 측정단위가 가구이지만 불평등도는 주로 인구로 접근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이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빈곤율이라고 할 때 이는 '빈곤가구율'이 아니라 '빈곤인구율'이다. 불평등도 역시 가구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인구로 표현되는 것이 전체 불평등 상황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³⁾. 또한, LIS와 같은 국제비교연구에서도 '가구' 단위 불평등도보다는 '개인' 단위 불평등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불평등도 측정에 사용될 균등화소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다. 먼저, 가구의 상이한 욕구와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다. 본 연구에는 OECD와 LIS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⁴⁾ 다음과 같은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가구의 1인 균등화된 소득'을 구한다.

$$Y^* = Y_i / \sqrt{s_i}$$

여기에서 Y_i 는 i 가구의 소득, s_i 는 i 가구의 가구원수, Y^* 는 i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이다. 다음으로, 불평등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가중치 (personal weight)를 부여하여야 한다. 즉, 가구원 수를 가중치로 부여해 줌으로써 가구단위를 인구단위로 환산해 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3) 이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불평등도 분석에서는 대부분 '1인 균등화된 가구불평등도'를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균등화지수를 취한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것은 가구불평등도라고 하기에 모호하고, 인구 불평등도라고 하기에 모호하다.

4) 최근 OECD에서는 성인균등화지수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초기의 성인균등화지수는 추가적인 성인 1인에 대하여 0.7, 아동 1인에 대하여 0.5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나, 수정된 균등화지수에서는 추가적인 성인 1인에 대하여 0.5, 아동 1인당 0.3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히 아동 1인에 대하여 0.5 혹은 0.3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진 외국의 경우 공공보육과 공교육 등의 보편적 활용이 가능하므로 아동에 대한 가계예산이 성인에 비해 매우 낮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과 교육이 개별 가구 지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정을 거쳐 분석된 결과는 인구 불평등도를 나타낸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주지한 바와 같이, 대표성의 문제와 적시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1996년, 2000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2003년)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국내의 불평등도를 분석한다. 단,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국민생활실태조사 간에 조사대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농어가를 제외한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⁵⁾.

이와 같은 표준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불일치로 인해 비교가능성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표준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1996년과 2000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3년의 국민생활실태조사 간에는 표본추출과 조사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가처분소득 계산 시 소득세 대신 직접세를 감해 줌으로써 소득이 약간 과소추정 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사업소득의 경우도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는 총수입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제한 금액으로 정의되는 반면,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총수입에서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으로 정의되고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세 연도의 분석결과를 완전히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연도의 자료

5) 농어가의 조작적 정의는 통계청의 방식대로 1. 경지면적 10ha(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2. 농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여 연간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획득하는 가구, 3. 판매목적으로 1년에 1개월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정의하였다. 최종 조사가구 중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외된 가구는 전체 표본의 약 8.7%였다.

모두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초로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을 통해 표본이 확보되었고, 표준화과정을 거치는 등 자료 간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따라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해외자료는 LIS 원자료이다. LIS는 OECD를 중심으로 총 29개국⁶⁾의 가구 및 개인별 소득과 지출에 관한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비영리기구이다. 2005년 2월 현재 각 국가별로 최소 1개부터 최대 10개까지의 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있다. 1980년 이전의 historical database를 포함하여 Wave I(1980년)부터 5년 간격으로 현재 Wave V(2000년 전후)까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시점과 동향분석에 유의미한 시점 수 등을 고려하여 불평등의 동향분석과 요인분해에는 Wave III(1990년 전후), Wave IV(1995년 전후), Wave V(2000년 전후) 데이터를 사용한다.

분석대상 국가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 state regime)분류에 따르고 있으며, LIS 자료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민주주의유형 3개국(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조합주의유형 3개국(독일, 이탈리아, 스페인)⁷⁾, 자유주의유형 3개국(캐나다, 영국, 미국)을 대상국가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중진국으로 분류되는 대만을 추가적인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6) OECD 회원국이 23개국, 비회원국이 6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LIS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7) 최근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조합주의 유형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지중해연안 국가유형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아래의 연구결과에서도 이들 두 유형의 국가간에 불평등 수준과 구조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불평등지수와 불평등지수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의 불평등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5분위배율, P90/P10(하위 10분위 평균소득 대비 상위 10분위 평균소득), 지니계수, 에킨슨지수 등의 불평등 지표들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원천별 불평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니계수분해 방법이 사용되었다. 러만과 이차키의 도출식에 따라, 소득원천별 소득과 총지니계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G = \sum_{k=1}^K \left[\frac{\text{cov}(x_k, F)}{\text{cov}(x_k, F_k)} \cdot \frac{2\text{cov}(x_k, F_k)}{m_k} \cdot \frac{m_k}{m} \right] = \sum_{k=1}^K R_k G_k S_k$$

여기에서, R_k 는 소득원천 k 의 순위와 총소득의 순위 간의 지니상관계수로 규정되고, G_k 는 소득원천 k 의 상대 지니(요인 k 에 대한 집중지수)이며, S_k 는 소득원천 k 의 총소득에 대한 비중이다(Lerman & Yitzhaki, 1994).

다음으로 학력별·연령별 불평등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엔트로피지수 분해방법이 사용되었다. 타일의 엔트로피지수를 좀 더 보편적인 공식으로 바꾼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Jenkins, S. P., 1995)

$$GE(\alpha) = \frac{1}{\alpha^2 - \alpha} \left[\frac{1}{n} \sum_i \left(\frac{y_i}{\mu} \right)^\alpha - 1 \right]$$

여기서 y 는 개인(혹은 가구) i 의 소득을 의미하며, μ 는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α 값은 각 소득계층에 대한 가중치이다. 집단간 불평등도 분해에는 주로 $GE(0)$ 가 사용되며, 이 때 전체 불평등도는 아래와 같이 집단간 불평등도와 집단내 불평등도로 분해할 수 있다⁸⁾.

8) α 값이 0과 1인 경우에는 l'Hopital의 정리를 이용하여 정리하게 됨. l'Hopital의 정리는 분수형태로 주어진 극한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정리임.

$$GE(0) = \sum_k \nu_k GE(0)_k + \sum_k \nu_k \log\left(\frac{1}{\lambda_k}\right)$$

단, $GE(0)_k$: k집단의 소득불평등도,

ν_k : k집단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equiv n_k/n$)

λ_k : k집단 평균소득의 모집단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equiv \mu_k/\mu$)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엔트로피지수의 전체 불평등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정태적 요인분해(윗식)에 관한 식을 시간에 대한 차분하고 이를 근사치를 이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도출된다.

$$\begin{aligned} \Delta GE(0) &\equiv GE(0)_{t+1} - GE(0)_t \\ &= \sum_k \overline{\nu_k} \Delta GE(0)_k + \sum_k \overline{GE(0)_k} \Delta \nu_k - \sum_k [\overline{\log(\lambda_k)}] \Delta \nu_k - \sum_k \overline{\nu_k} \Delta \log(\lambda_k) \\ &\approx \sum_k \overline{\nu_k} \Delta GE(0)_k \text{ (A항)} + \sum_k \overline{GE(0)_k} \Delta \nu_k \text{ (B항)} \\ &\quad + \sum_k [\overline{\lambda_k} - \overline{\log(\lambda_k)}] \Delta \nu_k \text{ (C항)} + \sum_k [\overline{\theta_k} - \overline{\nu_k}] \Delta \log(\mu_k) \text{ (D항)} \end{aligned}$$

위 식에서 Δ 은 차분연산자이며, $\overline{\nu_k}$ 는 비교대상이 되는 두 기간간의 평을 의미한다. 근사치에 의한 식을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좌변은 모집단 전체의 불평등 변화를 의미하며, 우변 A항은 불평등 변화의 순효과(pure inequality effects), B항 및 C항은 집단구성 변화의 효과(allocation effects), D항은 집단간 상대소득 변화의 효과(income effect)를 의미한다.

III. 불평등 동향과 요인분해

1. 불평등 동향

1996년, 2000년, 200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불평등도 변화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1996년에 4.28배에서 2000년에는 5.97배로, 다시 2003년에는 6.49배로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6년 2, 3, 4분위의 합계 소득점유율은 54.55%에서 2000년에는 51.51%로 감소하였다가 2003년에는 53.19%로 다시 약간 증가하였다. 그러나 1분위, 즉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1996년 8.60%에서 2000년 6.96%로 2003년에는 다시 6.2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득점유율에서의 이러한 변화경향은 좀 더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소득분포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⁹⁾.

<표 1> 한국의 가처분소득기준 불평등도의 변화

(단위: 천원, 배)

	1/5분위	2/5분위	3/5분위	4/5분위	5/5분위	5분위배율
1996	8.60	13.96	17.82	22.77	36.85	4.28
2000	6.96	12.54	16.88	22.09	41.53	5.97
2003	6.25	12.49	17.27	23.43	40.56	6.49
	P10	P50	P90	P90/10	P90/50	P50/10
1996	508	973	1,766	3.47	1.81	1.91
2000	460	1,027	1,987	4.32	1.93	2.23
2003	437	1,129	2,291	5.25	2.03	2.58
	지니계수		엣킨슨 지수($\epsilon=0.5$)		엣킨슨 지수($\epsilon=1$)	
1996	0.2778		0.0657		0.1313	
2000	0.3269		0.0920		0.1793	
2003	0.3367		0.0981		0.2065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다음으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10%(P10)의 평균소득은 1996년 508천원, 2000년 460천원, 2003년 437천원으로 계속 감소하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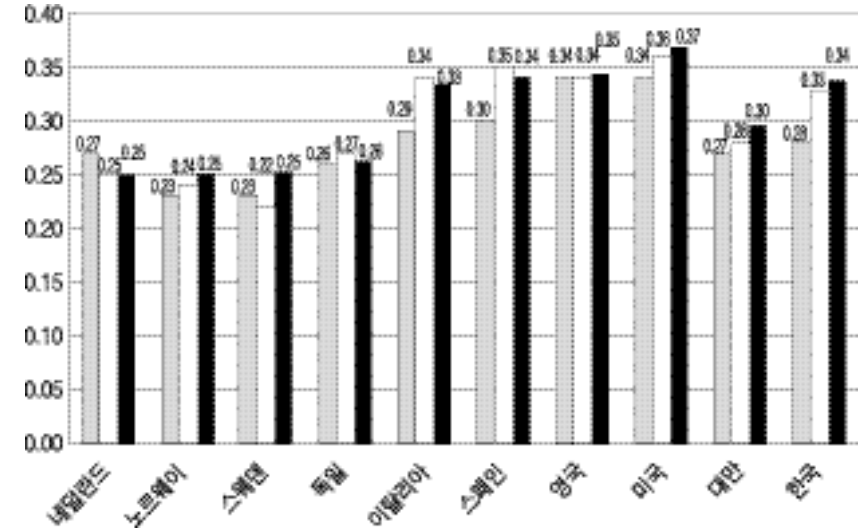
9) Wolfson지수와 ER지수를 사용한 소득양극화 연구 중 하나인 민승규(1996)에 의하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양극화현상은 외환위기를 경계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2001년 이후 2년간 소폭 하락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다가 2002년 이후 다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불평등도 경향과 거의 유사하다.

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중간 10%(P50)의 평균소득은 1996년 973천원에서 2000년 1,027천원, 2003년에는 1,129천원으로 미미하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P90)의 소득은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1996년 1,766천원에서, 2000년 1,987천원으로, 그리고 2003년에는 2,291천원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P90/10의 배율 역시 1996년 3.47배에서 2000년 4.32배로, 2003년에는 5.25배로 계속 격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앞의 점유율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분배수준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니계수 역시 1996년 0.2787에서 2000년에는 0.3317로 크게 증가했으며, 2003년에는 그 증가폭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앳킨슨지수의 변화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살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1>은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을 외국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이다. 전반적인 불평등 지표의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같은 사민주의 국가들보다는 약간 높고, 조합주의 유형의 독일, 동아시아국가 유형의 대만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도는 크게 악화되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지중해연안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영국,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의 수준과는 별개로 불평등 경향에 있어 1990년대 동안 비교대상 국가들 중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평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1990년 이래 가속화된 노동시장유연화와 복지국가 축소의 움직임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불평등 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야 하겠지만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¹⁰⁾.

(그림 1) 국가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



2. 소득원천별 지니분해

주지한 바와 같이, 지니계수는 소득원천 k의 지니계수(집중계수), 소득원천 k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지니상관계수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진다. 이 때, 절대적 기여도는 각 소득원천이 전체소득의 지니계수에서 차지하는 절대값을 나타내며, 상대적 기여도는 각 소득원천이 전체소득의 지니계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또한, 상대적 기여도를 각 소득원천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누어준 값(아래 <표 2>에서 B/A)은 각 소득원천이 전체소득과 비교해서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보여준다. 즉, 어떤 소득원천의 B/A값이 1보다 작으면 전체 소득불평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평등함을 의미하고, 반대로 1보다 크면 전체 소득불평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비슷하게, 상대적 기여도

10) 이에 대해서는 4절의 분석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에서 각 소득원천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빼준 값(아래 <표 2>에서 B-A) 역시 각 소득원천이 전체소득과 비교해서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보여주는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인 경우 전체소득에 비해 더 평등함을 의미하고, 플러스인 경우 더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1996년, 2000년, 2003년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분해한 결과는 아래 <표 2>과 같다. 먼저 각 소득원천별 지니계수를 나타내는 집중계수를 살펴보면, 1996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0.47→0.51→0.51), 사업소득(0.77→0.81→0.82), 재산소득(0.91→0.87→0.94)의 집중도가 높아진 반면, 이전소득(0.92→0.89→0.85)과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0.64→0.55→0.51)의 집중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기간 동안 시장소득의 불평등도는 높아진 반면, 재분배소득의 보편성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총합적 결과로 동 기간동안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0.28→0.33→0.34로 높아졌다.

다음으로 지니분해의 또 다른 요소인 각 소득원천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 증가(62%→62%→70%)가 두드러지며, 또한 이전소득(4%→6%→7%)과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5%→7%→9%)의 비중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의 (1) 참조).

소득원천별 지니분해의 결과 각 소득원천이 총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2]의 (2)이다. 그림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총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1996년 46%에서, 2000년 51%, 2003년 68%로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소득의 영향력은 동 기간 동안 각각 49%→47%→3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처분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데 일차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만으로 임금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¹¹⁾. 또 다른 주목할 만한

11) 실제로 2000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약간 줄어든 반면(7,795천명→7,736천명), 임금근로자의 수는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3,360천명→14,402천명)(www.kli.re.kr, 국내노동통계, 2006.4. 기준).

<표 2> 우리나라의 소득원천별 지니분해 결과

	항목	집중 계수 ¹⁾	비중 ²⁾ (A)	상관 계수 ³⁾	절대적 기여도 ⁴⁾	상대적 기여도 ⁵⁾ (B)	B/A ⁶⁾	B-A ⁷⁾
1996	근로소득	0.47	0.62	0.44	0.13	0.46	0.74	-0.17
	사업소득	0.77	0.33	0.55	0.14	0.49	1.50	0.16
	재산소득	0.91	0.05	0.49	0.02	0.08	1.57	0.03
	이전소득	0.92	0.04	0.02	0.00	0.00	0.06	-0.04
	공적이전	0.99	0.01	0.01	0.00	0.00	0.02	-0.01
	사적이전	0.93	0.04	0.00	0.00	0.00	-0.01	-0.04
	세금및기여금	0.64	-0.05	0.30	-0.01	-0.03	0.69	0.01
	가처분소득	0.28	1.00		0.28	1.00	1.00	0.00
2000	근로소득	0.51	0.62	0.56	0.18	0.51	0.82	-0.11
	사업소득	0.81	0.35	0.59	0.17	0.47	1.36	0.13
	재산소득	0.87	0.06	0.54	0.03	0.08	1.33	0.02
	이전소득	0.89	0.06	0.09	0.01	0.01	0.24	-0.05
	공적이전	0.96	0.02	0.11	0.00	0.01	0.29	-0.01
	사적이전	0.92	0.04	0.08	0.00	0.01	0.21	-0.04
	세금및기여금	0.55	-0.07	0.69	-0.03	-0.07	1.09	-0.01
	가처분소득	0.33	1.02		0.35	1.00	0.98	-0.02
2003	근로소득	0.51	0.70	0.65	0.23	0.68	0.96	-0.03
	사업소득	0.82	0.28	0.55	0.13	0.37	1.31	0.09
	재산소득	0.94	0.04	0.50	0.02	0.05	1.36	0.01
	이전소득	0.85	0.07	-0.03	0.00	0.00	-0.06	-0.07
	공적이전	0.94	0.03	0.00	0.00	0.00	0.00	-0.03
	사적이전	0.90	0.04	0.00	0.00	0.00	0.00	-0.04
	세금및기여금	0.51	-0.09	0.72	-0.03	-0.09	1.06	-0.01
	가처분소득	0.34	1.01		0.34	1.00	0.99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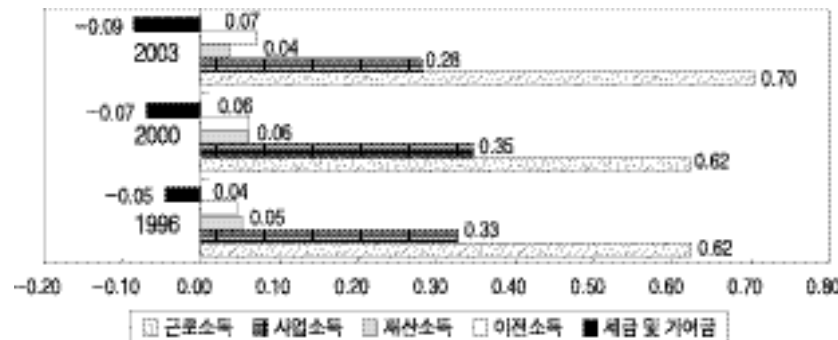
- 주: 1) 집중계수: 소득원천 k의 지니계수
- 2) 비중: 소득원천 k의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3) 상관계수: 총소득과 소득원천 k의 순위 상관관계(지니상관계수)
- 4) 절대적기여도: 소득원천 k의 총소득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
- 5) 상대적기여도: 소득원천 k의 소득불평등 비중
- 6) B/A: 소득원천 k의 상대적 소득불평등
- 7) B-A: 소득원천 k의 상대적 한계효과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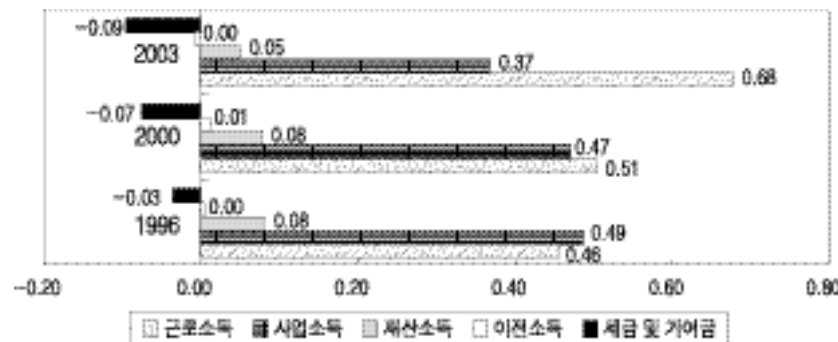
점은 세금 및 기여금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마이너스 효과)가 3%→7%→9%로 미미하지만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는 동 기간 중에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가 재고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여전히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각 소득원천의 총지니계수에 대한 한계효과를 나타내는 B/A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2]의 (3)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의 불평등효과는 여전히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보다는 낮게 나타나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0.74→0.82→0.96). 이러한 결과를 앞에서 총지니계수에 대한 근로소득의 기여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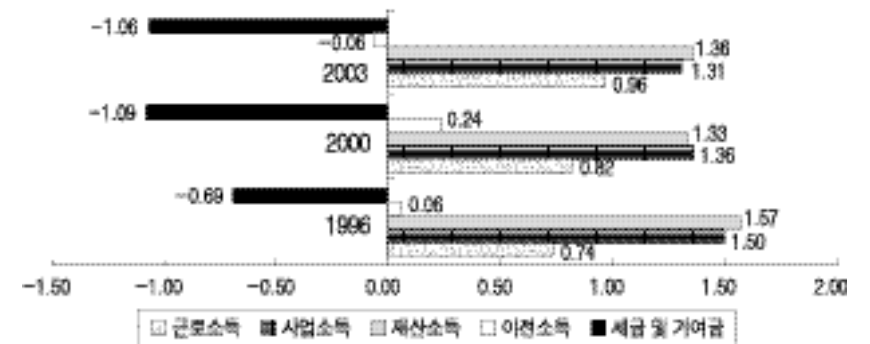
[그림 2] 우리나라의 소득원천별 지니분해 결과



(1) 각 소득원천이 총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2) 소득원천별 지니계수에서의 상대적 기여도 변화



(3) 소득원천별 지니계수에 미치는 한계효과의 변화¹²⁾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결합해 볼 때 전반적인 임금불평등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전소득의 한계효과는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증가하였으나 (0.06→0.24),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는 감소하여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0.24→0.06). 또한 앞에서의 결과를 뒷받침해주듯이,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마이너스 한계효과, 즉 지니계수를 낮추는 효과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0.69→-1.09→-1.06) 사회복지와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미미하지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1996년에서 2003년 사이, 즉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전체적인 소득불평등도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임금불평등의 강화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정책적 노력과 그 효과 또한 다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지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소득 역시 전체적인 불평등 개선효과는 매우 미미하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불평등 완화의 한계효과는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2)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B/A는 계산상으로 +로 나타나지만, 실제 지니계수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해석상 -이다. 즉 단위당 지니계수 감소효과를 의미한다. 그림에서는 이러한 해석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로 그렸다.

다음으로 2000년 전후로 주요 OECD 국가와 대만의 지니계수 분해 결과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3> 및 <표 4>와 같다¹³⁾. 먼저, 아래 <표 3>은 2000년을 전후로 한 주요 국가들의 각 소득원천이 총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여타의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의 비중이 각각 56.9%와 5.7%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업소득의 비중이 31.3%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¹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포함하는 시민주의 국가들과 조합주의로 분류되는 독일의 경우 근로소득과 이전소득, 그 중에서도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발달한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총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3%에 이른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 복지국가들¹⁵⁾ 중 북미국가들, 즉 미국과 캐나다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은 유럽대륙 국가들과 유사하지만, 이전소득의 비중은 미국이 10.3%, 캐나다 16.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국가로서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소득구조 역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보다는 낮지만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사업소득의 비중(19.3%)이 높고, 반대로 우리나라보다는 높지만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이전소득(10.3%)의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전소득 중에서도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3.9%)은 매우 낮은 반면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6.4%)이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교문화적 발전국가의 특징

13) 2000년 전후의 주요 국가들의 소득원천별 지니분해 결과는 <부표 1>을 참조하라.

14) 이는 물론 일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고용주와 자영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6.0%에 이르는데 비해, 대만 28.4%, 영국 12.1%, 독일 11.2%, 미국 7.2%로 우리나라보다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훨씬 낮다(OECD(2003)).

15) 1990년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분류에서도 영국의 경우 사실상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하기에 모호하다고 결론내리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류의 편의상, 그리고 최근 신보수주의적 경향을 반영하여 자유주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의 비중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주목되는 점은 한국(6.8%)과 대만(10.3%)의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매우 낮는데 비해, 스웨덴(43.2%), 독일(37.3%), 네덜란드(34.7%) 등의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매우 높고,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미국(28.8%) 역시 유럽대륙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지만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표 3> 국가별 각 소득원천의 비중(2000년 전후)

	국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사적 이전	세금 및 기여금	총소득
경상 소득	네덜란드	72.4	4.5	2.1	21.0	13.8	7.2		100.0
	노르웨이	67.1	7.2	6.8	18.9	15.7	3.2		100.0
	스웨덴	66.5	2.3	4.4	26.9	23.3	3.6		100.0
	독일	65.3	9.5	3.7	21.4	18.1	3.3		100.0
	캐나다	73.8	6.2	3.3	16.7	10.0	6.7		100.0
	영국	66.4	9.6	3.8	20.3	14.2	6.1		100.0
	미국	77.9	5.8	5.2	11.1	7.2	3.9		100.0
	대만	63.3	19.3	7.1	10.3	3.9	6.4		100.0
	한국	56.9	31.3	5.4	5.7	1.6	4.0		99.3
가처분 소득	네덜란드	97.5	6.1	2.9	28.3	18.6	9.6	-34.7	100.0
	노르웨이	90.5	9.7	9.2	25.5	21.2	4.3	-33.6	101.3
	스웨덴	95.2	3.3	6.2	38.5	33.4	5.1	-43.2	100.0
	독일	89.6	13.1	5.1	29.4	24.9	4.6	-37.3	100.0
	캐나다	97.9	8.2	4.3	22.1	13.3	8.9	-32.4	100.2
	영국	83.9	12.1	4.7	25.6	17.9	7.7	-26.4	99.9
	미국	100.4	7.4	6.7	14.2	9.2	5.0	-28.8	100.0
	대만	69.8	21.3	7.8	11.4	4.3	7.0	-10.3	100.0
	한국	62.1	34.8	6.0	6.3	1.8	4.5	-6.8	102.3

이는 우리나라와 대만 같은 개발주의적 발전국가들은 국가에 의한 재분

배정책이 상대적으로 미비하고, 주로 시장과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대륙 복지국가들의 경우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의 개입과 책임이 개인의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자유주의 국가들 역시 유럽대륙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국가 개입에 의한 재분배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각 국가의 불평등 수준, 이전소득과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불평등 완화 효과 등에 대한 분석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 4>와 [그림 3] (1)은 국가별로 각 소득원천이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에 미친 절대적 및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스웨덴(0.25), 네덜란드(0.25), 노르웨이(0.26), 독일(0.26) 등 유럽대륙 복지국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캐나다(0.30), 대만(0.30)이 중간 정도 수준이며, 한국(0.35), 미국(0.35), 영국(0.36)은 높은 수준으로 분류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소득원천의 절대적·상대적 기여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여타의 국가들에서는 근로소득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기여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지니계수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전소득(1%)과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7%)을 지니계수를 낮추는 데는 매우 미미한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스웨덴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10%)과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65%)이 전체 지니계수를 낮추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네덜란드(각각 -7%와 -56%), 노르웨이(-19%와 -52%), 독일(-7%와 -61%)도 공적이전과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지니계수를 낮추는데 매우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캐나다(각각 -8%와 -49%), 영국(-14%와 -33%)도 공적이전과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지니계수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2%)의 지니계수 감소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는데 비해 세금 및 기여금(-45%)의 지니계수 감소효과가 매

<표 4> 각 소득원천의 총불평등도에 대한 절대적·상대적 기여도(2000년 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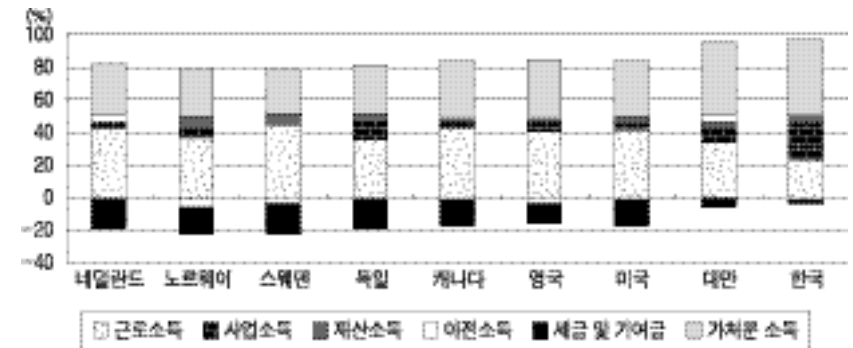
구분	국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세금및 기여금	가처분 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절대적 기여도	네덜란드	0.33	0.03	0.01	0.02	-0.02	0.04	-0.14	0.25
	노르웨이	0.32	0.05	0.07	-0.04	-0.05	0.00	-0.14	0.26
	스웨덴	0.39	0.01	0.04	-0.02	-0.03	0.01	-0.16	0.25
	독일	0.30	0.09	0.03	0.00	-0.02	0.01	-0.16	0.26
	캐나다	0.38	0.04	0.02	0.01	-0.02	0.03	-0.14	0.30
	영국	0.40	0.07	0.02	-0.03	-0.05	0.02	-0.12	0.35
	미국	0.44	0.04	0.04	0.01	-0.01	0.02	-0.17	0.36
	대만	0.23	0.05	0.03	0.02	0.00	0.01	-0.03	0.30
	한국	0.18	0.17	0.03	0.01	0.00	0.00	-0.03	0.35
상대적 기여도	네덜란드	1.29	0.14	0.05	0.08	-0.07	0.15	-0.56	1.00
	노르웨이	1.24	0.18	0.25	-0.16	-0.19	0.01	-0.52	1.00
	스웨덴	1.55	0.04	0.16	-0.10	-0.14	0.04	-0.65	1.00
	독일	1.16	0.35	0.11	-0.02	-0.07	0.06	-0.61	1.00
	캐나다	1.27	0.13	0.06	0.03	-0.08	0.10	-0.49	1.00
	영국	1.14	0.20	0.07	-0.07	-0.14	0.07	-0.33	1.00
	미국	1.20	0.11	0.12	0.03	-0.02	0.05	-0.45	1.00
	대만	0.75	0.16	0.11	0.07	0.01	0.03	-0.09	1.00
	한국	0.51	0.47	0.08	0.01	0.01	0.01	-0.07	1.00
한계효과	네덜란드	1.32	2.23	1.89	0.28	-0.36	1.57	-1.60	1.00
	노르웨이	1.37	1.88	2.76	-0.61	-0.90	0.34	-1.56	0.99
	스웨덴	1.63	1.18	2.56	-0.26	-0.41	0.77	-1.50	1.00
	독일	1.30	2.71	2.20	-0.06	-0.30	1.26	-1.64	1.00
	캐나다	1.30	1.52	1.49	0.13	-0.59	1.18	-1.51	1.00
	영국	1.36	1.66	1.47	-0.29	-0.79	0.86	-1.27	1.00
	미국	1.20	1.43	1.73	0.20	-0.20	0.92	-1.58	1.00
	대만	1.07	0.76	1.39	0.59	0.26	0.49	-0.83	1.00
	한국	0.82	1.36	1.33	0.24	0.29	0.21	-1.09	0.98

우 크게 나타났다. 다만,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적 이전소득(1%)의 경우 지니계수를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미미하지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9%)의 지니계수 감소 효과도 여타의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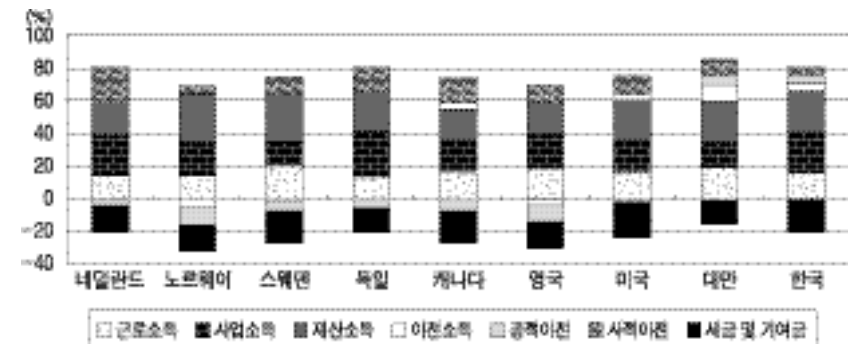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물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적이전소득과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여타의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아 일차적 원인이 있지만, 공적 이전소득과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한데 또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 4> 과 [그림 3] (2)에 제시되어 있는 각 소득원천별 총지니계수에 대한 한계 효과에서 잘 드러난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총지니계수에 대한 근로소득(1.63)과 재산소득(2.56)의 한계 증가효과가 매우 높으며, 공적 이전소득(-0.41)과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1.50)의 한계 감소효과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0.82)과 재산소득(1.33)의 총지니계수에 대한 한계 증가효과는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적이전(0.29)과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1.09)의 한계 감소효과, 즉 지니계수 개선효과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대만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사민주의와 조합주의 복지국가 유형의 국가들은 일차적 시장소득에서의 불평등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지만, 공적 이전과 조세를 통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최종적인 가처분소득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평등하게 나타났다. 캐나다, 미국, 영국과 같은 자유주의 유형의 복지국가 역시 정도는 덜하지만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소득에서의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공적 이전과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매우 미미한 결과 최종적인 가처분소득에서의 불평등도는 사민주의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각 소득원천의 총지니계수에 대한 효과(2000년 전후)



(1) 각 소득원천의 총지니계수에 대한 절대적 기여도



(2) 각 소득원천의 총지니계수에 대한 한계효과(B/A)

3. 구성집단별 엔트로피분해

엔트로피지수는 모든 불평등공리를 만족하는 불평등지수이다. 따라서 소득원천별 뿐만 아니라 학력별, 성별, 연령별로도 가법적 분해가 가능한 지수로 알려져 있다. 소득원천별 분해는 지니분해를 통해 살펴본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엔트로피 지수를 통해 학력별, 연령별 분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학력별, 연령별 분해는 GE(0)의 공식을 통해 집단내 불평등과 집단간 불평등으로 분해된다.

먼저 <표 5>에서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소득은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2003년의 경우 초졸 이하의 월평균소득은 770,938원인데 비해, 대학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1,802,510원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비중의 경우, 중졸 이하와 고졸 이하의 비중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대학 이상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학력상승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학력별로 GE(0)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불평등도의 수준은 1996년 0.1408에서

<표 5> 우리나라의 학력별 엔트로피분해 결과

구분	전체 불평등도	집단 k 비중 ν_k	집단내 불평등도	집단간 불평등도	월평균 가처분소득 (원)
			GE(0) _k	log(1/ λ_k)	
1996	초졸 이하	0.1268	0.1875	0.2982	809,007
	중졸 이하	0.1610	0.1140	0.1181	968,690
	고졸 이하	0.4396	0.1115	0.0267	1,061,400
	전문대졸 이하	0.0622	0.1118	-0.0195	1,111,508
	대학 이상	0.2104	0.1375	-0.2545	1,405,958
	전체	0.1408	1.0000	0.1270	0.0138
2000	초졸 이하	0.1459	0.2188	0.3612	829,298
	중졸 이하	0.1383	0.1659	0.1987	975,634
	고졸 이하	0.4099	0.1633	0.0397	1,143,719
	전문대졸 이하	0.0964	0.1593	-0.0541	1,256,243
	대학 이상	0.2095	0.1773	-0.3226	1,643,070
	전체	0.1980	1.0000	0.1743	0.0237
2003	초졸 이하	0.1413	0.2402	0.5249	770,938
	중졸 이하	0.1212	0.1944	0.2341	1,031,109
	고졸 이하	0.4003	0.1953	0.0696	1,215,477
	전문대졸 이하	0.0585	0.1470	-0.0528	1,373,783
	대학 이상	0.2787	0.1804	-0.3244	1,802,510
	전체	0.2315	1.0000	0.1946	0.037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2000년은 0.1980로 2003년은 0.2315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내 불평등과 집단간 불평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996년의 경우 집단내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90.2%, 2000년의 경우 88.0%, 2003년의 경우 84.1%로 집단내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에 비례하여 집단간, 즉 학력 간 불평등의 상대적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집단내 불평등도를 살펴보면, 초졸 이하와 대학 이상의 집단내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중졸 이하와 고졸 이하의 집단내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집단간 불평등에서도 초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다른 집단과의 집단간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내 불평등과 집단간 불평등 모두 1996년에 비해 2003년에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6> 학력수준이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

구분	전체 변화	순효과 A항	집단구성의 변화		집단간 상대소득변화 D항	
			B항	C항		
1996→2000	절대적 기여도	0.0571	0.0462	0.0011	0.0006	0.0092
	상대적 기여도(%)	100.0	80.8	2.0	1.1	16.2
2000→2003	절대적 기여도	0.0335	0.0195	0.0007	0.0032	0.0100
	상대적 기여도(%)	100.0	58.3	2.1	9.5	30.0

<표 6>을 통해 학력집단 불평등의 동태적인 변화요인을 살펴볼 경우, 전체 불평등도에서 불평등에 의한 순효과, 즉 집단내 불평등의 변화의 상대적 기여도는 1996년과 2000년 사이에는 80.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집단간 상대소득변화가 16.2%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00년과 2003년 사이에는 동태적 변화가 크게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집단내 불평등 변화의 기여도는 58.3%로 1996년과 2000년에 비해 22.5%포인트 감소한 반면에 집단간 상대소득변화는 30.0%로 1996년과 2000년에 비해 13.8%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집단구성의 변화에 있어서도

11.6%로 8.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이 기간 동안 엔트로피지수로 표시되는 불평등도 역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 기간 동안에는 학력집단내 소득격차의 확대가 가장 큰 원인인 점에서는 동일하나, 2000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에는 학력집단 간의 소득격차의 확대 역시 불평등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다. 즉, 최근들어 교육의 소득효과, 즉 학력 프리미엄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변화에 따른 GE(0)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6년의 경우 집단내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9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집단간 불평등은 단지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 역시 집단내의 불평등도가 9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단간 불평등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3년의 경우 집단내 불평등이 95.1%, 집단간 불평등이 4.9%로 나타나 미미하나마 연령집단간 불평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평등에 대한 수준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평등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6년의 경우 29세 이하의 집단내 불평등이 0.1100인 반면 60세 이상은 0.3225로 29세 이하에 비해 2.9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의 경우에는 동 비율이 2.31배, 2003년에는 2.23배로 다소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간변화에 따른 연령의 불평등효과를 살펴보면, 전체 불평등도에서 불평등에 의한 순효과, 즉 연령집단 내에서의 불평등의 상대적 기여도는 1996년과 2000년 사이에는 77.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다음으로는 학력과는 달리 집단구성 변화 중 B항 즉 연령별 집단구성비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16.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18.0%로 학력에 비해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구성의 변화가 불평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1996년에 비해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연령이 높은 집단의 불평등도가 청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집단간 상대소득변화가 4.1%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의 순효과는 71.2%로 앞의 비교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집단간 상대소득의 변화는 10.5%로 비교년도에 비해 6.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불평등도의 수준은 1996년 0.1408에서 2000년은 0.1980로 2003년은 0.231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수준별 집단내 불평등도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집단내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불평등에 대한 수준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평등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7> 우리나라의 연령별 엔트로피분해 결과

구 분	전체 불평등도	집단 k 비중 ν_k	집단내 불평등도	집단간 불평등도	월평균 가처분소득
			GE(0) _k	log(1/ λ_k)	
1996	29세 이하	0.1050	0.1100	0.1125	974,070
	30~39세	0.3652	0.1143	0.0294	1,058,460
	40~49세	0.2882	0.1182	-0.0328	1,126,469
	50~59세	0.1654	0.1533	-0.1354	1,248,186
	60세 이상	0.0761	0.3225	0.1692	920,360
	전체	0.1408	1.0000	0.1373	0.0036
2000	29세 이하	0.0673	0.1383	0.1189	1,056,611
	30~39세	0.2973	0.1570	0.0606	1,120,051
	40~49세	0.3343	0.1860	-0.0721	1,279,065
	50~59세	0.1836	0.1944	-0.1288	1,353,691
	60세 이상	0.1175	0.3191	0.2413	934,921
	전체	0.1980	1.0000	0.1914	0.0066
2003	29세 이하	0.0467	0.1462	0.0412	1,250,577
	30~39세	0.2903	0.1629	-0.0395	1,355,643
	40~49세	0.3364	0.2260	-0.0625	1,387,237
	50~59세	0.1806	0.2347	-0.0826	1,415,367
	60세 이상	0.1459	0.3266	0.3896	882,680
	전체	0.2315	1.0000	0.2202	0.0113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표 8〉 연령이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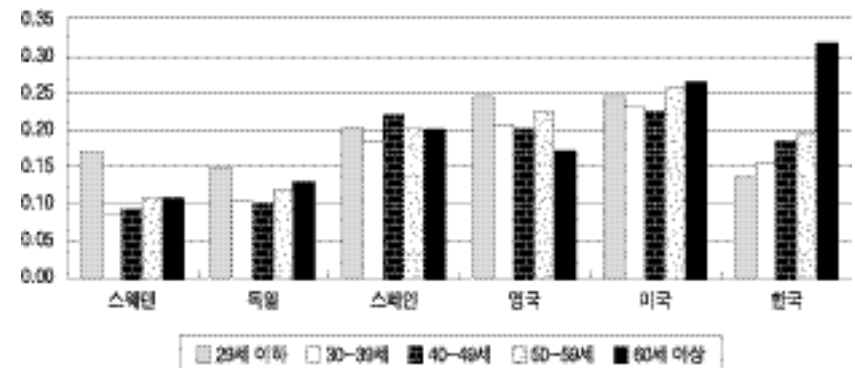
구분	전체 변화	순효과 A항	집단구성의 변화		집단간 상대소득변화 D항	
			B항	C항		
1996→2000	절대적 기여도	0,05719	0,04454	0,00955	0,00076	0,00235
	상대적 기여도(%)	100,0	77,9	16,7	1,3	4,1
2000→2003	절대적 기여도	0,03362	0,02393	0,00492	0,00123	0,00354
	상대적 기여도(%)	100,0	71,2	14,6	3,7	10,5

마지막으로, 외국의 경우 국가별 학제의 편차가 심하여 표준화된 분류를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므로, 연령별 분해만을 시도하였다. 2000년 전후를 기준으로 할 때, 각 나라의 연령별 GE분해의 결과는 〈부표 2〉과 같다. 먼저, 전체적인 엔트로피지수의 수준은 사민주의 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각각 0.1382, 0.1201, 0.1177로써 다른 비교대상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연령별 특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60대 이상의 비중이 높으며, 이들 연령집단의 집단내 불평등도 매우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내 불평등이 공히 30~50대 사이의 왕성하게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연령층에 비교해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조합주의 국가로 분류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의 경우 독일을 제외하고는 사민주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GE(0)의 값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특성에 있어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분포하고 있으며, 집단내 불평등에 있어서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29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집단내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된 영국, 미국,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비해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0.2522로써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특성에 있어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집단내 불평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미

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불평등수준이 낮은 반면 멕시코는 비교대상국가들 중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0.4288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특성에 있어서도 멕시코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집단내 불평등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집단내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민주의 국가들과 독일은 전반적인 연령 집단내 불평등이 매우 낮으며, 29세 이하의 불평등도가 높은 반면 60세 이상의 불평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모든 연령집단의 집단내 불평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특히 노인집단, 즉, 60세 이상의 연령집단내 불평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내 불평등의 수준은 미국보다 높지 않지만, 60세 이상의 연령집단내 불평등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인집단내 불평등도는 노령연금과 같은 국가의 소득보장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연령별 집단내 불평등도 추이



IV. 결론 및 정책방향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불평등 확대(청년임금하락, 학력별 임금격차의 확대 등)¹⁶⁾와 자본이득의 증대로 인한 상위소득자의 상대적 몫 증가, 인구학적 요인(노령인구 증가, 편부모가구의 증가 등) 그리고 제도적 요인(사회복지 확대, 세금과 기여 및 급여의 관계변화 등)에 의해 주요하게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도 증가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이러한 불평등 증가가 주요하게 어떠한 요인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불평등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분석기간 중 이러한 불평등도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과의 비교 결과, 사민주의와 조합주의 유형의 국가들은 일차적인 시장소득에서의 불평등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지만, 공적이전과 조세를 통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최종적인 가처분소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소득을 비롯한 일차적인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이전과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효과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의 불평등 증가에서는 학력간 소득격차의 효과가 커진 것으로 밝혀져 교육프리미엄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불평등에

16) 특히, 미국은 1968년 이래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집단인 남성들 사이에서는 20년 동안 불평등이 2배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 10년 동안 모든 남성 노동자들의 수입 증가분이 노동인구 최상위 20%에게 돌아갔으며, 그 중 64%가 최상위 1%에게로 귀착되었다. 수입 대신 소득을 조사하는 경우, 최상위 1%의 노동인구는 훨씬 더 많은 몫, 즉 전체 소득 증가분의 90%를 갖게 된다(Thurow, 1996).

어서는 60대 이상의 집단내 불평등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미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노인층의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가 갖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각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담론이 ‘이데올로기적 수사 혹은 정치적 음모’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 수준에서 양극화 담론 자체나 이에 대한 공격 모두 엄밀하고 과학적인 현실에 대한 분석에 기반했다기 보다는 다분히 이념적이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 또한 엄격히 말해 양극화에 대한 분석이라 할 수는 없지만 분배를 둘러싼 총체적인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의 이러한 경향은 분배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좀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주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분석기간 동안 약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세의 누진율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 소득탈루가 심하고—국가의 입장에서는 소득과약률이 낮고—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낮은 소득과약률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공적이전소득 즉 사회복지제도를 체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적이전소득의 일차적 목적은 소득재분배라기보다는 안정

(security)과 최소보장(minimum guarantee)이라 할 수 있다. 즉, 선진 복지국가의 경우 사회복지가 모든 국민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 보육 및 교육, 보건의료, 노후보장 등을 통해 사회적 재생산을 가능하게 해 주는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는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공적이전소득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특히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특례노령연금, 무각출 노령연금 등의 보완대책을 아울러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례노령연금, 경로연금 등의 보완대책을 두고 있으나, 특례노령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매우 적고, 경로연금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수급비율이 적으며 급여액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경로연금의 확대 개편 등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임금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이 임금소득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의 임금소득 불평등 증가는 임금소득자의 비중 증가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임금소득의 한계불평등효과 또한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는 최근의 노동시장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임시·일용직의 증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학력간 임금격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최소보장과 근로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근로여건-보육과 교육, 의료, 실업보장 등- 조성이 사회복지의 역할이라면, 근로가능한 계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보장해 주는 것은 노동시장제도 및 정책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노동시장유연화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금지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금재호·김승택, 「빈곤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추계학술세미나, 2001. 9, pp.93~129.
- 김상권, 「1990년대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 『부산대학교 논문집』 제44집, 1997.
- 김성용·이계임,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분석」, 『농촌경제』 25권 4호, 2002 겨울.
- 김용성, 「빈곤실태분석을 위한 거시통합모형 개발」, 한국개발연구원, 2005.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김적교, 「빈곤층과 비빈곤층간의 소득분배」, 『경제연구제』 제8권 제2호, 1987.
- 민승규,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박준기·문한필·김용택,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 『농촌경제』, 제27권 4호, 2004 겨울.
- 박찬용·김진욱·김태완,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99-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성명재·김종면,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분배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재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유경준·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연구 03-05,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윤기중, 「한국경제의 불평등 분석」, 박영사, 1997.
- 여유진, 「한국에서의 소비지출 불평등에 관한 연구: 집합적 소비의 사회복지 지적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이준구,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1992.
- 임병인·전승훈,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 분석],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제6회,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전병유, 「경제위기 전후 노동시장유연화 I: 고용유연성 추이」, 『매월노동동향』, 한국노동연구원, 2004. 10.
- 정건화·남기곤, 「경제위기 이후 소득 및 소비구조의 변화」, 윤진호·유철규(편),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 2000, pp.323~350.
-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02-04, 한국노동연구원, 2002.
-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 현진권·강석훈, 「한국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경제학연구』 46(3), 1998, pp.145~167.
- 황수경·정진호, 「최근 노동시장 동향과 2005년 전망」, 『노동리뷰』, Vol.1, 2005.
- Atkinson, A. B. & Bourguignon, F.,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Elsevier, 2000.
- Berhanu, Samuel, "Economic Analysis of Household Expenditures",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West Virginia University, 1999.
- Blackorby, C. & Donaldson, D., "Measures of Relative Equality and Their Meaning in Terms of Social Welfare," *Journal of Economic Theory*, 18, 1978, pp. 55~80.
- Blundell, R. & Preston, I., "Income, Expenditure and the Living Standards of UK Households," *Fiscal Studies*, Vol.16, No.3, 1995.
- Cowell, F. A., & Kuga, K., "Additivity and the entropy concept: An axiomatic approach to inequality measurement", *Journal of Economic Theory*, 25, 1981.
- Cowell, F. A., & Kuga, K., "Inequality measurement: an axiomatic approach", *European Economic Review*, 15, 1981.
- Cowell, Frank A., *Measuring Inequality*, 2nd ed., Prentice Hall, 1995.
- Dalton, H., "The Measurement of the Inequality of Income," *Economic Journal*, Vol.30, pp.348~361, 1920.
- Esping-Andersen, Gosta.,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Fei, J. C. H., Rains, G. & Kuo, S. W. Y., "Growth and the Family Distribution of Income by Factor Componen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92, No.1, 1978, pp.17~53.
- Garner, Thesia I, "Consumer Expenditures and Inequality: An Analysis Based on Decomposition of the Gini Coeffici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93, pp.134~138.
- Goodman, Aliss., Paul Johnson & Steven Webb, *Inequality in the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Jenkins, Stephen, P., "Accounting for Inequality Trends: Decomposition Analyses for the UK, 1971~1986," *Economica*, Vol 62, No. 245, 1995.
- Johnson, D., *Poverty, Inequality and Social Welfare in Australia*, Physica-Verlag Heideberg, 1996.
- Lerman, Robert I. & Shlomo Yitzhaki, "Effect of Marginal Changes in Income Sources on U.S. Income Inequality", *Public Finance Quarterly*, Vol.22, No.4, October, 1994.
- Litchfield, Julie A., "Inequality: Methods and Tools", World Bank PovertyNet website: <http://www.worldbank.org/poverty>, 1999.
- Mookherjee, D. & Shorrocks, A. F.,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Trend in UK Income Inequality”, *Economic Journal*, Vol 92, 1982.

OECD, *Labour Force Statistics*(1982~2002), 2003.

Pendakur, Krishna, “Changes in Canadian Family Income and Family Consumption Inequality Between 1978 and 1992”,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44, No.2, 1998, pp.259~283.

Shorrocks, A. F.,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Vol.50 No.1, 1982, pp.193~211.

Thurow, L., *The future of capitalism: How today’s economic forces shape tomorrow’s world*. London: Nicholas Brealey Publishing, 1996.

Wodon, Quentin, “Between Group Inequality and Targeted Transfer,”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45, No.1, 1999, pp.21~39.

Wolfson, Michael C., “When Inequality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4, 1994.

Yitzhaki, S., “Relative Deprivation and the Gini Coeffici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93, 1979, pp.321~324.

Yitzhaki, S. & R. Lerman, “Income Stratification and Income Inequal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7(3), 1991, pp.313~329.

〈부표 1〉 국가별 소득원천별 지니분해

	항목	집중 계수	비중 (A)	상관 계수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B)	B/A	B-A
네덜란드	근로소득	0.46	0.98	0.72	-0.02	-0.07	-0.36	0.31
	사업소득	0.96	0.06	0.59	0.04	0.15	1.57	0.07
	재산소득	0.89	0.03	0.53	-0.14	-0.56	1.60	0.03
	이전소득	0.71	0.28	0.10	0.25	1.00	1.00	-0.20
	공적이전	0.60	0.19	-0.15	0.32	1.24	1.37	-0.25
	사적이전	0.91	0.10	0.44	0.05	0.18	1.88	0.05
	세금및기여금	0.46	-0.35	0.89	0.07	0.25	2.76	-0.21
	가처분소득	0.26	1.00		-0.04	-0.16	-0.61	0.00
노르웨이	근로소득	0.45	0.90	0.78	-0.05	-0.19	-0.90	0.34
	사업소득	0.93	0.10	0.52	0.00	0.01	0.34	0.09
	재산소득	0.89	0.09	0.80	-0.14	-0.52	1.56	0.16
	이전소득	0.61	0.26	-0.26	0.26	1.00	0.99	-0.41
	공적이전	0.67	0.21	-0.35	0.39	1.55	1.63	-0.40
	사적이전	0.89	0.04	0.10	0.01	0.04	1.18	-0.03
	세금및기여금	0.46	-0.34	0.88	0.04	0.16	2.56	-0.19
	가처분소득	0.25	1.01		-0.02	-0.10	-0.26	-0.01
스웨덴	근로소득	0.50	0.95	0.82	-0.03	-0.14	-0.41	0.60
	사업소득	0.95	0.03	0.31	0.01	0.04	0.77	0.01
	재산소득	0.89	0.06	0.72	-0.16	-0.65	1.50	0.10
	이전소득	0.54	0.38	-0.12	0.25	1.00	1.00	-0.48
	공적이전	0.53	0.33	-0.19	0.30	1.16	1.30	-0.47
	사적이전	0.86	0.05	0.22	0.09	0.35	2.71	-0.01
	세금및기여금	0.39	-0.43	0.96	0.03	0.11	2.20	-0.22
	가처분소득	0.25	1.00		0.00	-0.02	-0.06	0.00
독일	근로소득	0.53	0.90	0.64	-0.02	-0.07	-0.30	0.27
	사업소득	0.93	0.13	0.75	0.01	0.06	1.26	0.22
	재산소득	0.84	0.05	0.68	-0.16	-0.61	1.64	0.06
	이전소득	0.60	0.29	-0.02	0.26	1.00	1.00	-0.31
	공적이전	0.60	0.25	-0.13	0.33	1.29	1.32	-0.32
	사적이전	0.94	0.05	0.35	0.03	0.14	2.23	0.01
	세금및기여금	0.53	-0.37	0.80	0.01	0.05	1.89	-0.24
	가처분소득	0.26	1.00		0.02	0.08	0.28	0.00

<부표 1> 계속

	항목	집중 계수	비중 (A)	상관 계수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B)	B/A	B-A
캐나다	근로소득	0.48	0.98	0.80	0.38	1.27	1.30	0.29
	사업소득	0.94	0.08	0.48	0.04	0.13	1.52	0.04
	재산소득	0.91	0.04	0.48	0.02	0.06	1.49	0.02
	이전소득	0.68	0.22	0.06	0.01	0.03	0.13	-0.19
	공적이전	0.65	0.13	-0.27	-0.02	-0.08	-0.59	-0.21
	사적이전	0.88	0.09	0.40	0.03	0.10	1.18	0.02
	세금맞기여금	0.51	-0.32	0.87	-0.14	-0.49	1.51	-0.17
	가처분소득	0.30	1.00		0.30	1.00	1.00	0.00
영국	근로소득	0.58	0.84	0.82	0.40	1.14	1.36	0.30
	사업소득	0.93	0.12	0.62	0.07	0.20	1.66	0.08
	재산소득	0.91	0.05	0.56	0.02	0.07	1.47	0.02
	이전소득	0.62	0.26	-0.16	-0.03	-0.07	-0.29	-0.33
	공적이전	0.61	0.18	-0.45	-0.05	-0.14	-0.79	-0.32
	사적이전	0.90	0.08	0.33	0.02	0.07	0.86	-0.01
	세금맞기여금	0.57	-0.26	0.78	-0.12	-0.33	1.27	-0.07
	가처분소득	0.34	1.00		0.35	1.00	1.00	0.00
미국	근로소득	0.51	1.00	0.86	0.44	1.20	1.20	0.20
	사업소득	0.95	0.07	0.55	0.04	0.11	1.43	0.03
	재산소득	0.90	0.07	0.70	0.04	0.12	1.73	0.05
	이전소득	0.76	0.14	0.09	0.01	0.03	0.20	-0.11
	공적이전	0.77	0.09	-0.09	-0.01	-0.02	-0.20	-0.11
	사적이전	0.91	0.05	0.37	0.02	0.05	0.92	0.00
	세금맞기여금	0.62	-0.29	0.92	-0.17	-0.45	1.58	-0.17
	가처분소득	0.37	1.00		0.36	1.00	1.00	0.00
대만	근로소득	0.45	0.68	0.70	0.21	0.78	1.16	0.11
	사업소득	0.75	0.23	0.23	0.04	0.14	0.64	-0.08
	재산소득	0.73	0.05	0.61	0.02	0.08	1.64	0.03
	이전소득	0.94	0.06	0.12	0.01	0.03	0.41	-0.04
	공적이전	0.88	0.01	0.03	0.00	0.00	0.08	-0.01
	사적이전	0.66	0.05	0.14	0.00	0.02	0.33	-0.03
	세금맞기여금	0.81	-0.01	0.79	-0.01	-0.03	2.34	-0.02
	가처분소득	0.27	1.00		0.27	1.00	1.00	0.00

자료: LIS, 「LIS 원자료」, 2000년 전후

<부표 2> 국가별 연령별 엔트로피분해

구 분	전 체 불평등도	집단 k 비중 ν_k	집단내 불평등도	집단간 불평등도	
			GE(0)k	$\log(1/\lambda_k)$	
네덜란드 (1999)	29세 이하		0.0875	0.1581	0.1048
	30~39세		0.2718	0.1537	0.0252
	40~49세		0.2710	0.1152	-0.0132
	50~59세		0.1769	0.1487	-0.1233
	60세 이상		0.1928	0.1180	0.0605
	전체	0.1382	1.0000	0.1359	0.0023
노르웨이 (2000)	29세 이하		0.1161	0.1479	0.2432
	30~39세		0.2481	0.0908	0.0362
	40~49세		0.2509	0.0950	-0.0974
	50~59세		0.1675	0.1280	-0.2002
	60세 이상		0.2173	0.1144	0.1428
	전체	0.1201	1.0000	0.1098	0.0103
스웨덴 (2000)	29세 이하		0.1084	0.1679	0.3074
	30~39세		0.2314	0.0867	0.0511
	40~49세		0.2369	0.0912	-0.0628
	50~59세		0.1874	0.1090	-0.2297
	60세 이상		0.2359	0.1075	0.1052
	전체	0.1177	1.0000	0.1057	0.0120
독일 (2000)	29세 이하		0.0710	0.1470	0.3707
	30~39세		0.2306	0.1060	0.0723
	40~49세		0.2400	0.1025	-0.0860
	50~59세		0.1742	0.1180	-0.1690
	60세 이상		0.2842	0.1303	0.0562
	전체	0.1260	1.0000	0.1171	0.0089
이탈리아 (2000)	29세 이하		0.0279	0.1932	0.0842
	30~39세		0.1772	0.1863	0.1133
	40~49세		0.2479	0.2032	0.0357
	50~59세		0.2354	0.2000	-0.1276
	60세 이상		0.3117	0.1976	0.0069
	전체	0.2008	1.0000	0.1974	0.0034
스페인 (2000)	29세 이하		0.0523	0.2049	0.1013
	30~39세		0.1949	0.1836	0.0427
	40~49세		0.2214	0.2188	-0.0427
	50~59세		0.1983	0.2003	-0.1783
	60세 이상		0.3330	0.2002	0.1117
	전체	0.2073	1.0000	0.2013	0.0060

<부표 2> 계속

구 분	전 체 불평등도	집단 k 비중 ν_k	집단내 불평등도	
			GE(0)k	집단간 불평등도 $\log(1/\lambda_k)$
캐나다 (2000)	29세 이하	0.1096	0.1873	0.1860
	30~39세	0.2545	0.1575	0.0472
	40~49세	0.2876	0.1510	-0.0382
	50~59세	0.1765	0.1926	-0.1824
	60세 이상	0.1718	0.1558	0.0989
	전체	0.1710	1.0000	0.1648
영국 (1999)	29세 이하	0.1079	0.2451	0.1313
	30~39세	0.2414	0.2084	0.0340
	40~49세	0.2307	0.1978	-0.1045
	50~59세	0.1843	0.2248	-0.2124
	60세 이상	0.2357	0.1733	0.2260
	전체	0.2171	1.0000	0.2047
미국 (2000)	29세 이하	0.1296	0.2436	0.2696
	30~39세	0.2482	0.2285	0.0822
	40~49세	0.2699	0.2258	-0.0903
	50~59세	0.1616	0.2553	-0.2260
	60세 이상	0.1908	0.2636	0.0891
	전체	0.2522	1.0000	0.2407
멕시코 (2000)	29세 이하	0.1071	0.3047	0.1840
	30~39세	0.2708	0.3910	0.0826
	40~49세	0.2626	0.4841	-0.1306
	50~59세	0.1773	0.4247	-0.1006
	60세 이상	0.1823	0.4459	0.0915
	전체	0.4288	1.0000	0.4222
대만 (2000)	29세 이하	0.0849	0.0985	0.0684
	30~39세	0.2883	0.1247	0.0416
	40~49세	0.3509	0.1272	-0.0032
	50~59세	0.1577	0.1499	-0.2064
	60세 이상	0.1182	0.2574	0.1844
	전체	0.1489	1.0000	0.1430

자료: LIS, 「LIS 원자료」, 2000년 전후

Summary

The trend of inequality and policy implication in Korea

Eugene Yeo, Taewan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some policy implication by comparing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inequality by income sources, schooling and age about the time of foreign currency crisis (1996, 2000, 2003) to foreign countries regarding the polarization and distribution problem as hot issues emerg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first, all indicators of inequality continue to deteriorate from foreign currency crisis up to now. Second, what leads to this deterioration is wages.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has littl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otal degree of inequality, though bettering income redistribution a little bit. Third, the aggravation of inequality coming from increase of income gap by schooling shows us that schooling effect getting important more and more. The result of inequality analysis by age tells us that the inequality among people over 60 is worse relatively than European countries.

These results mean that government must intervene more to improve distribution problem. Concretely saying, we ne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using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systematize and exp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 which is public transfer income. The percentage of public transfer income out of a disposable income in Korea is much smaller than foreign countries, and especially high income inequality among the old who have low working ability

needs us to make up for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old. Finally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t present by wage inequality suggests that we need to protect irregular workers and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discrimination prevention in order to make better the inequality of market income.